

‘10배의 혁신 위해 새로운 도전’

전북연구원, 2024 연구성과·2025 정책 인사이트 행사 개최... 지속 가능 발전 위한 정책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글로 벌 생명경제도시로 이끌기 위한 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방향 인사이트가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26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폐쇄적이던 연구관행을 벗어 던지고 ‘성과공유’를 통해 연구가치와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혁신형 개방연구로의 변신을 선언했던 전북연구원이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두 번째 자리다.

이날 1부로 마련된 개회식은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열렸으며, 2부 정책인사이드는 전주대 예술관 403호와 404호, 405호에서 각각 개최됐다.

1부 기조강연에 나선 이현서 정책기획관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경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 실현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 전진, 도약, 웅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부단하게 도전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하이퍼터브 공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 등 10대 도전사제가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025년 10대 연구 아젠다’를 발표했다. 그는 백년대계 미래산업 성장엔진 접화, 실감 민생경제 강화, 농생명산업으로의 혁신과 대역력 강화, 문화관광자원의 글로벌화와 메가 스포츠 대회 발굴, 사람·기업·자본이 모이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 전북형 일자리와 워라밸에서 찾는 인구해법, 인구감소시대 초광역권 생존전략,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안전망 강화, 청정



26일 전북연구원 주최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4 연구성과와 2025 정책 인사이트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환경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이 키우는 인재, 인재가 키워가는 지역 등을 제시했다.

2부 정책방향 모색 분야는 △생명경제산업 선도, 전북의 도전과 응전 △전북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인프라 구축 △기후재난과 인구절벽, 차별화된 지역전략 모색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재운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국가 주력산업 전망과 전북의 대응’이란 정책강연을 통해 불확실한 교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요시장 환경변화

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방향을 설명했고,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초광역권 정책과 전북자치도의 대응과제를 주문했다. 또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분야에서 국가 환경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전북의 대응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소멸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전망을 내

놔으며, 정종복 전북자치도위원과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인구소멸지역 탈출을 위한 대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단 1%의 가능성을 보고 가까이 도전에 나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실패는 아니다”라면서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책사업과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했고 올해는 10배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가까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 상시 해수유통으로 변경해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등, “홍수기 외에는 배수갑문 상시 개방 가능... 관리수위 조절을”

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만금의 관리수위를 평균 해수면(0m)으로 높이고, 상시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상임대표 오창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등 10여 명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배수갑문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상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4년간 새만금 배수갑문 운영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새만금 내측 수위가 평균 해수면(0m)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새만금호의 현황 관리수위(-1.5m)를 0m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수질 개선과 수산업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고가 3.5m, 동서도로는 3.2m, 수변 도시는 2.65m, 방수제는 2.6~2.8m로 설정돼 있어,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행 관리수위를 유지한 채 내부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전북 수산업 몰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강우량 증가로 새만금 내부가 홍수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관리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전북 지역 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방조제 조성으로 새만금 내부 어패류 산란장이 파괴되면서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됐으며, 해수 유출량이 줄어들면서 외해역의 해류 유속이 감소하고 퇴적량이 증가해 수산업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18조 원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되었고, 매년 1조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상시 해수유통을 통해 수산업을 복원한다면, 수년 내에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확대될 경우,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시화호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시화호보다 6배 넓은 면적과 깊은 수심을 고려할 때, 수질을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6배 이상의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올해부터 매년 관리수위를 50cm 이상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의 빈산소층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새만금개발청도 조력발전 설치를 검토 중인데, 관리수위를 조정하면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국 상시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과 전북 수산업을 동

시에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추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상시 해수유통을 미루기보다,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그간 상시 해수유통 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고, 관리 수위의 변경은 전문학적인 비용 발생은 물론 안전성 검토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지만 정부의 3단계 수질 개선 단기대책 평가가 시행되고 있어 조력발전 및 배수갑문 추가 설치, 새만금 상류에 홍수 조절지 설치 등 추가 대책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산업의 전환과 관련해 고수준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막기 위해 김육상 양식 연구, 바지락 대체 품종 개발,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 등에 힘써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새만금의 개발과 보존에 대해 적정성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이수진 도의원 “유명무실 도정 자문단, 즉각 중단”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도정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구상한 도정자문단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도정혁신 자문단 등을 구성하고 38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문위원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23회로 60.5%에 달하며, 단 1명이 참석한 회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이 없는 도정자문단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내 정치권 “현재,尹 탄핵 인용하라”

민주 도당·더민주 전북혁신회의 등 성명·논평 발표 “후안무치도 아까운 최후진술”... 현재서 보인尹 태도 비판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법 재판 최후진술과 관련, 도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 전북도당 “尹 현재 최후진술, 후안무치도 아깝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후안무치도 아까운 민주 민생 파괴범의 최후진술이라고 혹평했다.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12·3 내란 계엄의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했다”며 “윤석열은 12·3 친위 쿠데타를 공표한 비상계엄담화를 시작으로 12월 4일의 2차 담화, 12월 7일의 3차 담화 등을 통해 시종일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강조하고 정체불명의 반국가세력을 호출했다. 마침내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를 본 시민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12·3 내란 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후안무치라는 말도 아까운 망언이자 공익과 국민의 머리와 가슴에서 지운 윤석열의 피폐한 인식과 정서가 드러난 발언이라는 것이 민주당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이에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내란 행위와 현재 변론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권한 기구인 국회를 침탈하는 등 탄핵 사유를 다시 환기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해야”

더민주 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강충상)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보인 태도와 관련된 입장이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인과 측근들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반성 없이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과 변명만 가득했으며, 오히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민 갈등과 경제·외교 위기를 고려할 때,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12·3 비상계엄 덕에 나도 계몽됐다”는 발언과 “이재명 대표와 의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했다”는 주장은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민주 혁신회의는 “이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필수적으로 노력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희화화하는 것이며, 논점을 흐리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민생지원센터, 시민단체와 민생 간담회

청소년 이동권·에너지 정책·자원 순환 등 주요 의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북민생지원센터와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10시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민생 현장 목소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실무 책임자, 전북민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16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이동권,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시민소통, 지방의회 정치개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보공 전북민생지원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전북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소개와 간담회 추진 개요 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활발한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북민생지원센터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개최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피해보상 법률 제정 촉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제11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부산 강철호, 충남 이철수 공동회장) 제5차 정기회를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전북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협의회의 실무 기구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중앙정부의 민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위원장이 제안한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만호 기자